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7월 1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입지총괄과 김용채 과장(2110-5301), 이윤섭 사무관(5303), 김광수 주무관(5306)

산업단지 대상 합동 종합 정밀 안전진단 실시

- 18개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811개, 기반시설 71개소 진단 -

□ 정부는 안전한 산업단지를 구현하고,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, **관계기관 합동***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

* 소방산업기술원, 안전보건공단, 환경공단, 시설안전공단, 전기안전공사, 가스안전공사, 산업단지공단

□ 정밀 안전진단은 **5년간 매년 20%씩** 전국 87개 노후 산업단지* 내 유독물, 전기·가스 설비 등 중소기업 취약설비와 도로·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(지자체 관리)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,

*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·일반산업단지 대상

○ **금년 7월**부터는(~'13.11월) 우선 **18개 국가산업단지*** 내 **811개 중소기업**과 **71곳의 기반시설**을 진단할 계획

* 광양, 광주첨단, 구미, 군산, 군산2, 남동, 대불, 명지녹산, 반월, 시화, 여수, 온산, 울산미포, 익산, 창원, 포항, 부평, 주안

□ 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하고, 시설별로 복수의 법률(15개 이상*)이 적용되는 복합 공간이나, 그간 안전검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전문기관이 각 시설별 검사를 개별적으로 설계·진행하여 왔음

* 위험물 취급설비(위험물안전관리법, 방재청),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(유해화학물질관리법, 환경부), 전기설비(전기사업법, 산업부) 등

○ 이로 인해 산단 및 기업의 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였고, 점검기관의 협업 미흡 등으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왔음

□ 이를 위해, 환경공단, 전기안전공사, 시설안전공단, 가스안전공사, 소방산업기술원, 안전보건공단, 산업단지공단은 **MOU를 체결**하고,

○ **중소기업 설비**에 대해서는 ① 유해화학물질(환경공단), ②전기(전기안전공사), ③가스(가스안전공사), ④ 폭발성 위험물(소방산업기술원), ⑤ 사업장(안전보건공단) 별로 **법령상 담당 기관**이,

○ **노후 기반시설**에 대해서는 **지자체 주관**으로 시설안전공단과 민간 엔지니어링사가 함께 진단을 추진할 계획

□ 특히, 기존 검사·점검은 위험요인 지적 및 시정명령에 그쳐왔으나, 금번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실제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**개선방식도 함께 제시**할 예정으로,

○ 진단 결과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**관계부처 사업과 연계*** 하여 **개선을 지원**할 계획

* 중소기업 정책자금(중기청), 클린사업장 조성(고용부) 등

□ 금번 '산업단지 정밀 안전진단' 및 후속 대책을 통해 **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일자리**를, **지역주민에게는 안전한 생활환경**을 조성하여,

○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지역행복의 거점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윤섭 사무관 (☎ 02-2110-5303) 또는 김광수 주무관 (☎ 02-2110-53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자료]

노후 국가산업단지 정밀 안전진단 추진방안

1. 추진 배경

□ 최근 연이어 구미, 여수 등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**산업단지에 대한 안전 현황 진단의 필요성** 제기

□ **안전검사·점검**으로는 **안전관리의 사각지대**가 존재하며, **정밀 안전진단** 비용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**부담**

○ 안전검사·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, 법령 상 명시된 **최소 기준에의 부합 여부**만을 확인

○ 안전진단은 안전검사·점검에 비해 **진단 수준이 높으나**, 그 만큼 **비용 역시 높은 편**이어서 중소기업에 부담

□ 아울러, 도로·교량 등 지자체 관리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여력과 재원 부족으로 적기에 진단·정비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

➡ 現 안전검사·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필요성 대두

2. 정밀 안전진단 추진 방안

◇ 금년 7월부터는 5개월 간(~'13.11) 18개 노후 국가산업단지* 내 입주기업 811개사, 기반시설 71개소 대상으로 추진

* 광양, 광주첨단, 구미, 군산, 군산2, 남동, 대불, 명지녹산, 반월, 시화, 여수, 온산, 울산미포, 익산, 창원, 포항, 부평, 주안

○ (예산) 50억원(기업체 : 41억/기반시설 : 9억원)

○ (기관) 안전보건공단, 환경공단, 소방산업기술원, 시설안전공단, 가스안전공사, 전기안전공사, 산업단지공단 참여

1 진단대상 선정

○ **[취약 중소기업]**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, 재해율*, 위험설비** 보유 현황, 사망사고 발생 현황, 공장 노후도 등 고려

* 근로자 100명당 사망자+부상자 비율 / ** 유독물 취급설비·취약 가스설비

➡ 18개 노후 국가산단 입주 기업(총 21,099개) 중 811개 중소기업 선정 (유해화학물질, 전기, 가스, 폭발성 위험물, 사업장 전반 등 5대 분야 대상)

〈 안전진단 대상 중소기업 선정 기준 〉

① 최근 3년 간 업종별 산업재해율이 상위 5%에 해당하는 기업

②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전수조사('13.3월~6월) 결과,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업

③ 가스안전공사의 종합적인 판단(가스 사용량, 가스 압력, 설비 노후도 등 고려) 결과, 가스설비가 취약한 기업

④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

⑤ 공장설립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기업

○ **[노후 기반시설]** 관리 주체인 지자체 의견*,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 안전기관의 현장 사전답사 결과('13.6월) 등 반영

* 지자체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제출한 정밀 안전진단 필요 기반시설의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

➡ 18개 노후 국가산업단지 내 교량, 도로, 하수관거, 교통시설, 파이프랙*, 침수지역 등 총 71곳의 기반시설이 대상

* 여수 등 석유화학이 주력업종인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원료수송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이프 및 거치대

2 안전진단 기법

○ 설비 및 기반시설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육안검사, 작동여부 확인, 진단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요인 도출

○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비 개선방안을 제시

3 안전진단팀 구성

○ **(중소기업 취약설비)** 원칙적으로 유해화학물질, 전기, 가스, 폭발성 위험물, 사업장 등 5대 분야별로 법령 상 담당 기관이 진단 주관*

* 유해화학물질(환경공단), 폭발성위험물(소방산업기술원), 전기(전기안전공사) 등

○ **(노후 기반시설)** 시설안전공단 및 민간 엔지니어링사가 해당 산단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안전진단 수행

➡ 시설별 전문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, 기업 및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**'합동' 진단을 원칙으로 추진**

4. 향후 추진 일정

○ '13.7월부터 안전진단에 본격 착수하여 '13.11월까지 완료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('14.上)